

2. 정부

가.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법률 및 제도 정비 현황

- 이하에서는 주로 공적연금제도 체제 정비¹⁵⁾ 및 그 밖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각 부문별 제도의 정비 현황을 정리함.
 - 일본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1995년 12월 「고령사회대책기본법」이 시행되었으며, 이 법을 기반으로 1996년 7월 「고령사회대책대강」(高齢社會對策大綱)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, 「고령사회백서」를 국회에 제출
 -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법률 제·개정 현황, 고령사회대책대강의 상세한 내용은 〈부록〉을 참조
 - * 고령사회대책대강은 1996년 제정되어 200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.
- 2012년 두 번째로 개정된 「고령사회대책대강」의 주요 내용을 요약·정리하면 다음과 같음.
 - 고령사회대책대강은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의 확립, 저연금 및 무연금(無年金) 대응, 라이프스타일 선택에 중립적인 연금제도의 구축 등을 기본 골자로 함.¹⁶⁾
- 첫째, 지속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.
 - 「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」(2011년 법률 제121호)이 제정되어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을 50%로 유지함.

15) 이하에서 소개하는 제도의 정비 현황은 2011, 2012년에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된 ‘고령사회백서(개요판)’를 참고함.

16) 前田展弘, ‘高齢社會對策大綱の改定と今後の對策視點～急がれる眞の「人生90年時代」への轉換’, 니ッセ이基礎研究所, 2012.08.31.